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29명

체납 총 금액 443억2700만원으로 2015년보다 41% 가량 ↑ 지방세 체납액도 ↑... 한병도 의원 "강도 높은 추적조사 필요"

고액 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가 1,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경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



자의 체납 총 금액은 443억2,700만원이었다. 이는 2015년(801명)보다 41%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360억300만원이던 체납액은 2019년 443억2,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 기준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시, 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884명, 1.46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64명, 1,041억5,300만원), 인천(492명, 270억9,600만원), 대전(346명, 266억6,100만원) 순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2,400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1,511명, 40대가 1,501명이었다. 특히 30대 이하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88명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지방 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베를린 소녀상 철거 반대" 전북 대학생겨레하나 관계자들은 14일 전주 풍남문광장 소녀상 앞에서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수요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국내 식중독 환자 10명 중 1명이 군장병

최근 5년동안 환자 전체 3만257명 중 3790명으로 12.5%에 달해 이용호 의원 "식약처, 군납식품 안전성에 보다 주도적 관리"

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 이상이 군장병이고 예비군 훈련 때 먹는 도시락(급식 포함) 업체의 절반 이상은 해썬 미인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군납식품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1,512건으로 관련 환자 수는 3만



25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장병의 식중독 발생 건수는 139건, 환자 수는 3,790명 발생해 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5%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예비군 훈련 때 지급되는 도시락(급식 포함)업체 8개 중 4개 업체는 해썬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납식품 안전관리는 국방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주관해 운영중인데 국방부는 이 협의기구의 참가기관으로서 연간 2회 정도 참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용호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로 국방부 중심으로 군납식품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 하더라도 식중독 환자의 10% 이상이 군장병이고 예비군 도시락 납품업체의 절반 이상이 해썬 미인증 업체라는 점은 군납식품의 안전성에 보다 더 많은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별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가 운영중이지만 국방부가 군납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 점검이나 위생교육을 요청해야 하는 정도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군장병의 건강은 국방력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에 걸린 군장병 환자 수가 3,790명이 넘고 있다"며 "두 부처 협의의 틀을 통해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군장병과 예비군들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민간위탁금 지원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이병철 도의원, 도정 질문서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제한입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철(더불어민주당, 전주) 의원은 14일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내수침체 장기화 등 경영여건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북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지원시 지역제한입찰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도 민간위탁 수탁기관과 보조사업자는 법률과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위탁금과 보조금을 집행한다"며 "하지만 수탁기관 중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다른 특정 지역으로 확대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이성계 리더십의 비밀'

박용근 도의원 출판기념회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15일 저서 '이성계 리더십의 비밀'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기념회는 지방의원 최초로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인터넷) 출판기념회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이 저술한 '이성계 리더십의 비밀'은 이성계가 여말선초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5가지 코드로 분석한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백약 무효' 전북 인구 감소

최찬욱 도의원 "원대한 비전보다는 현실적 대책 필요 백화점 내열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들 구조조정해야" 송하진 도지사 '긍정적' 반응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주목'

전북도의 회 최찬욱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경고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년간 전북도 인구는 1999년 200만9,379명에서 2019년 181만6,000명으로 19만3,379명이 줄어 9.6%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었다.



최 의원은 "원대한 비전보다는 현실적 대책 필요"라며 "백화점 내열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들 구조조정해야"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도정 전반에 인구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 의원은 "원대한 비전보다는 현실적 대책 필요"라며 "백화점 내열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들 구조조정해야"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도정 전반에 인구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팀을 두고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명확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지 않은 채 부서를 신설·운영함으로써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인접 시도에서 초광역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초광역화가 가시화되면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돼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전북도 인구정책의 미시적인 목표와 거시적인 정책목표를 정교하게 가다듬는 동시에 대도약기 확산의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도 구체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써 대도약 기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백화점 내열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구조조정해서 육식을 가려내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도정 전반에 인구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식품 가공산업·온라인 플랫폼 강화 시급"

송성환 도의원 "거시기장터 활성화 전략·지원책 마련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및 공적 온라인 플랫폼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송성환 의원은(전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도정질문에서 "도내 농가소득(4,121만원)은 전년 대비 8.6% 줄고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만이 농가소득을 올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전북의 100년 먹거리인 탄소 산업 지원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예산이 갖춰져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농식품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시대 간편식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한류 열풍에 힘입어 K-푸드 인기가 높아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가공품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곡물, 특용작물 등의 원재료를 전북도가 직접 수매해 농식품 가공기업에 공급, 농민과 농·식품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산물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 온라인 플랫폼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유통시장의 운영실태 비교 결과 전북도 '거시기장터'의 작년 매출은 45억1,300만원인 반면 강원도는 128억원, 충남이 261억원으로 6배 이상 많았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도 4,324개 업체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송성환 의원은 "거시기장터가 지역활력을 못 하고 있어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북도가 거시기장터 활성화 전략은 물론 공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황의탁 도의원 "사료관리법 개정 필요한 상황"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 분뇨 배출 전에 1차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고 그 후 발생물질에



대해서는 물리적 방법과 시설보강 등을 병행하는 정책이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14일 3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그동안의 가축분뇨 악취 저감 정책은 냄새 발생을 정적인 분뇨가 발생한 후에 실행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가축분뇨에 냄새 저감제를 섞어 분뇨

의 배출 전에 1차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탁 의원은 "가축 분뇨에 냄새 저감제를 섞어 먹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농가에서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장에서 사료를 제조하는 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냄새 저감제를 투입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전북도가 관계 부처와 정지권을 상대로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필요하다"

강용구 도의원 "농민기본소득 검토를"

"보여주기식 행정 지양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한 매뉴얼과 현실성있는 지속적 관리·지원 필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더불어민주당, 남원)의원이 14일 제37회 제3차분회의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매뉴얼 및 가상훈련 운영, 농업경제 안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지급, 학



교 내 환경 문제, 수험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등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강용구 의원은 "지역차별 재난행정에 있어 지자체별 차별화된 대응에 따른 성과 차이는 분명하다"면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행안부의 고시에만 의존해 매뉴얼을 수정하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도내의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재난상황 시에 이변과 달리 신속하게 협

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체계적 복구 프로그램 마련과 항구적 복구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이 넓과 저수지 등으로 확대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세법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연, 사회재난에 상응하는 매번 피해가 있는 농가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내 인구의 5.24%를 차지하는 농민 인구의 연령군 농민소득이 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내 경제의 사각지대가 농업 분야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농민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